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7면	춘천 동양아이텍 신사옥 준공	1
강원도민일보	08면	"특자도 시대 양질 일자리·고용 창출 기여"	2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임시회 개회	2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작...조례안 심의, 현장 점검	3
MBC 강원영동	온라인	제3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국내외 연수 조례안 안 ...	4
G1방송	온라인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5분 발언 이어져	5
강원도민일보	03면	"태백 청정수소특구, 기술검증 실패 본보기"	6
江原日報	02면	수십억 들였는데... 태백 청정수소 실증사업 실패	6
江原日報	02면	"18개 시·군 기금관리 전반 재정검 시급"	7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원미희 강원도의원, "지자체 자금관리 이자수..."	8
스포츠서울	온라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 본청과 18개 시군은 걱정 ...	9
신아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 제안	10
스포츠서울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	11
시사파일	온라인	양숙희 의원, "소양호 둘레길,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12
신아일보	온라인	양숙희 강원도의원, "소양호 둘레길,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	13
연말뉴스		"소양호 둘레길, 데크.매트 없이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	1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동해안 연안 침식과 사라진 혈세	16
KBS 춘천	온라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불투명	17
江原日報	21면	[동정]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	18
江原日報	13면	10년 방치 속초항 여객터미널 道 매입 촉구	19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가 매입을"	19
江原日報	01면	강원 4개 의대, 정원 200명 증원 신청	20
江原日報	15면	정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609명 도입	20
강원도민일보	01면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 '성큼' ... 정부평가 우위 선점	21
江原日報	12면	수출입 불균형 옥계항 기반시설 시급	22
강원도민일보	02면	① 9364억원 대규모 투자 ② 균형발전론 ③ 수도권 인접성	22
강원도민일보	02면	ITX 마음 손실비용 감소...강원도 분담액 2억8500만원	22

江原日報	12면	‘출산부터 돌봄까지’ 양양육아지원센터 개원	23
강원도민일보	04면	최초 지자체 주도 '화천형 온종일 돌봄' 시작 아이들 웃음꽃	23
강원도민일보	05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평창가스폭발 보상 기약 없는 기다림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에 사활을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의대 증원 정밀한 정책 내놔야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선정 모든 행정력 동원을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 경제 적신호, 지역경기 진작 대책 시급하다	27



◇(합)동양아이텍 신사옥 준공식이 5일 춘천시 퇴계제2농공단지에서 열려 고광만(춘천상공회의소회장) 대표를 비롯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참석인사들이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박승선기자

춘천 동양아이텍 신사옥 준공

유·무선 IT통신망 구축 전문 기업 (합)동양아이텍(대표:고광만)의 본사 사옥 준공식이 5일 춘천 퇴계제2농공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각급 기관·단체

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고광만 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발에 맞춰 미래 일거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고용창출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평소 지역사회 봉사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온 동양아이텍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

다”며 “동양아이텍의 사옥 준공을 축하하고 앞으로 대박 나길 바란다”고 했다.

동양아이텍은 25년간 유·무선 IT 통신망 구축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 100여명, 연매출 130억원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신사옥은 대지 1,200평, 건평 850평, 5층 규모다. 장현정기자

2024 03 06 ()

강원도민일보

08



동양아이텍(대표 고광만) 신사옥 준공식이 5일 퇴계 제2농공단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관련기관 단체장, 시도의원,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특자도 시대 양질 일자리·고용 창출 기여”

동양아이텍 신사옥 준공식

동양아이텍(대표 고광만)은 5일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옥 준공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시의회 의장,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이왕재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 테이프 컷팅식과 감사패 전달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한광호(강원도민일보감사) 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대표소장, 최인순 티제이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어 준공 기념떡 컷팅식도 이뤄졌다.

고광만 대표는 “30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덕분에 지금의 동양아이텍이 됐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발맞춰 도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도 우리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4 03 06 ()

江原日報

02



도의회 임시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박승선기자

2024 03 05 ()

KBS 춘천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작...조례안 심의, 현장 점검



9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작...조례안 심의, 현장 점검

KBS뉴스 평창군-원주여성민우회, 폭력예방교육 협약 체결

강원도의회가 오늘(5일)부터 12일까지 제326회 임시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10여 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교육청 산하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또, 강원개발공사와 강원연구원 등 강원도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14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2024 03 05 ()

MBC 강원영동

제3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최...국내외 연수 조례안 안 다루

김인성



제3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오늘(5)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고,
내일(6)과 모레 이틀간 경제산업위원회가
태백시청과 강원랜드, 고한구공탄시장과
삼탄아트마인을 현지 시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개정을 약속했던 강원도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관련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 325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4 03 05 ()

G1방송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5분 발언 이어져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8

강원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G1NEWS

주요뉴스 정선군,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609명 투입

강원자치도의회는 오늘(5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 등 22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원미희 의원은 "광역단체 이자율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0.54%로 충남에 이어 가장 낮다"며,

"금고 선정부터 자금관리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숙희 의원도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양호 둘레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제326회 임시회가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 12일까지 8일간 열린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태백 청정수소특구, 기술검증 실패 본보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술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 ‘혈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5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해 12월 해제수소(본지 2023년 12월 4일자 2면 등)을 밝힌 태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 특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업체인 그린사이언스가 ‘부실 기업’이었음에도 강원도가 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해 “기술검증 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

기”라고 지적했다.

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을 두고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공모를 하고 실제도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금같은 세금을 태웠다”고 지적했다.

양숙희(춘천) 의원은 “합성테크는 합성수지가 소양호로 유입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 원주 치악산 들레길 같은 정원형 숲길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자연재난,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새 금고 선정 시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적정수준



김기홍

양숙희

심오섭



원미희

박대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현(화천) 의원은 “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이 3만㎡ 이상인데,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민간 투자 유치가 제한적”이라며 “군 지역의 경우 3만㎡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수십억 들였는데... 태백 청정수소 실증사업 실패

주도 업체 경영악화 실증 능력 부족 드러나... 규제특구도 해제 보조금 23억 회수 불가 道 감사위 당시 담당자 3명에 중징계의 신징에 이달 말 2차 감사- 최문순 前 지사 수사의뢰 검토

무연탄과 폐플라스틱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태백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이 현재 수십억원의 투입하고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에서 당시 도청의 담당 국장을 비롯해 관련자 3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징계 대상자들은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위가 또다시

최문순 전 지사를 향한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감사위는 최근 ‘태백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을 주도했던 최문순 도청 당시 경제진흥국과 첨단산업국,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차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화됐으며 2027년까지 192억원을 투입해 무연탄과 폐플라스틱에서 그린수소를 주

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참신함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조성’ 공약, 김진태 도청의 ‘태백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 온 업체가 경영 악화로 실증 능력이 없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고 반년 만인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도 해제됐다.

이 사업에 투입된 도비 보조금 23억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는 사업 초기 경제진흥국이 무연탄기금을 R&D 사업에 투자할 수 있

도록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며 당시 국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또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팀장과 실무자는 사업비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않아 이미 투입된 보조금은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며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는 과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위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달 말까지 2차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위는 이르면 이달 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1차 감사 당시 감사위원들은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수사 의뢰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격론 끝에 결론은 내지 못했으며 이달 말 2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된다.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질 경우 현 감사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특혜 의혹, UAM 시제기 개발사업에 이어 세 번째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팀을 새로 꾸려 2차 감사를 벌인 후 이달 말 감사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 여부는 감사위원간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 03 06 ()

02

“18개 시·군 기금관리 전반 재점검 시급”

도의회 임시회서 강원문화재단 ELS 논란 관련 제기

속보=강원문화재단이 ELS(주가 연계증권)에 기금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의 원금 손실이 우려(본보 2월26·27일자 2면 등 보도)되자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기금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원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원미희(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사용이 불가한데 어떻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투자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 본청과 시·군 기금관리 이자수입률은 2022년 기준 전국 평

균 이자율 절반인 0.5%대다. 전국 평균 이자율 1.06%를 반영하면 184억원, 최고이자율 2.20%를 반영하면 588억원 손실이 추정된다”며 “금고 선정부터 약정, 이자율 등 기금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기홍(국민의힘·원주) 부의장은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제 원인인 철암발전소, 드론택시의 사례와 같이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공모하고 실제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세금을 태우는 실증사업 예산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를 제안한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전국

에서 유일하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은 도에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며, 도내 문화재 중 20% 가까운 문화재가 산재한 강릉에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양숙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을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 이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이행, 오는 12일까지 임시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현정기자

2024 03 05 ()

[위클리오늘] 원미희 강원도의원, "지자체 자금관리 이자수익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 및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분청 및 시·군의 이자율에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이자율 및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손실액을 산출하여 손실추정액을 제시했다.

원미희 의원은 "2022년 도분청과 시·군 전체의 기금이자율은 0.54%인데 전국평균이자율 1.06%를 반영하면 184억원, 최고이자율 2.20을 반영하면 588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도 분청의 2022년 공공예금이자수익은 54억원 ~247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특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속초시의 경우, 이자수익은 5억 1천만원으로 이자율 0.40%였는데 평균(1.02%)과 최고치(2.85%)를 대입하면 7억6천만원~30억 4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COFIX 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의 차이가 나고, 고금리 7~8% 대출로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잔치를 할 때도 강원특별자치도는 0.5%대 낮은이자율 적용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초시의 7배이상의 최고수익률을 보인 광주광역시에 직접 확인한 사항을 예를 들어 금고 선정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자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또 "도 분청과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뿐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교육청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2024 03 05 ()

스포츠서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 본청과 18개 시군은 적정 이자 수입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22년 강원도 본청 및 시·군 이자수입률 0%대-전국평균의 절반 낮은 이자율로 ‘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 184억~ 588억원 손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억원 ~ 247억원 손실 추정액 제시



원미희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자금관리 이자수입률은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되는 0.5%대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 ‘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184억~ 588억원 손실, ‘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4억원 ~ 247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 본청과 18개 시군은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며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 및 ‘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근거로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이자율에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이자율 및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손실액을 산출하여 손실추정액을 제시했다.

‘22년 도본청과 시·군 전체의 기금이자율은 0.54%인데 전국평균이자율 1.06%를 반영하면 184억원, 최고이율 2.20%를 반영하면 588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 본청의 ‘22년 공공예금이자수익은 54억원 ~247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특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속초시의 경우, 이자수익은 5억 1천만원으로 이자율 0.40%였는데 평균(1.02%)과 최고치(2.85%)를 대입하면 7억6천만원~ 30억 4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COFIX 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의 차이가 난다며 고금리 7~8% 대출로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잔치를 할 때도 강원도는 0.5%대 낮은이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원미희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초시의 7배이상의 최고수익률을 보인 광주광산구에 직접 확인한 사항을 예를 들어 금고 선정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자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하였다.

또, 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뿐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교육청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03 05 ()

신아일보

심오섭 강원도의원,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 제안

조덕경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 없는 강원, 도내 문화재 20% 산재한 강릉에 설립 타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이 3월5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를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이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를 제안했다.

심오섭 의원은 '작년 4월 강릉은 대형산불로 경포대가 소실될 위험을 겪었으며, 도유형문화재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되고 상영정은 전소되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봄철 대형산불 외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호와 체계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 기관이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라고 설명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은 강릉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며, 도내 전체 문화재 중 20% 가까운 문화재가 산재한 강릉에 설립하는 것이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고 역설했다.

심오섭 의원은 '지난해 5월 문화재청의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에서 강릉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이에 강릉을 필두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과 원주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기에 우리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국립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4 03 05 ()

스포츠서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예맥문화재 연구소 강릉 유치 제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없는 강원, 도내 문화재 20% 산재한 강릉에 설립 타당



심오섭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 2)이 3월5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 제안을 했다.

심오섭 의원은 “작년 4월 강릉은 대형산불로 경포대가 소실될 위험을 겪었으며, 도유형문화재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되고 상영정은 전소되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봄철 대형산불 외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호와 체계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 기관이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은 강원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 필요하며, 도내 전체 문화재 중 20% 가까운 문화재가 산재한 강릉에 설립하는 것이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고 역설했다.

심오섭 의원은 “지난해 5월 문화재청의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에서 강릉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이에 강릉을 필두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춘천과 원주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기에 우리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국립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34

2024 03 05 ()

양숙희 의원, “소양호 둘레길,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조명남 기자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3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하면 名品길이 됩니다!!’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을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고/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사파일

양의원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양호 둘레길은 소양호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5.9km 구간을 2025년까지 72억을 들여 데크와 야자매트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만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의원은 데크와 야자매트길이 아닌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하는 이유를 조성공법, 환경보존, 안전관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각 카테고리별로 설명하면서 ‘치악산 둘레길’을 벤치마킹하여 마적산 등산로, 가마골 생태탐방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숲길 조성방안으로서는 맨발길, 트레킹코스, 산악자전거길, 산림치유, 출렁다리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명품길로 조성하고 단축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정기행사 유치로 활용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명남 기자 chomnn@gmail.com

2024 03 05 ()

신아일보

양숙희 강원도의원, “소양호 둘레길,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조덕경 기자

제326회 임시회 5분 발언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3월 5일(화), 제 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하면 名品길이 됩니다!’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을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하면 名品길이 됩니다!’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을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양호 둘레길은 소양호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5.9km 구간을 2025년까지 72억을 들여 데크와 야자매트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만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데크와 야자매트길이 아닌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하는 이유를 조성공법, 환경보존, 안전관리,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각 카테고리별로 설명하면서 ‘치악산 둘레길’을 벤치마킹하여 마적산 등산로, 가마골 생태탐방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숲길 조성방안으로서는 맨발길, 트레킹코스, 산악자전거길, 산림치유, 출렁다리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명품길로 조성하고 단축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정기행사 유치로 활용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4 03 05 ()

연합뉴스

"소양호 둘레길, 데크.매트 없이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지자체 이자 수익률 저조 지적 등 나와



양숙희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을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6)은 5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공법, 환경보존, 안전관리,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고려하면 데크와 야자매트길이 아닌 친환경 숲길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양호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75억원을 들여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일원에 2025년까지 5.9에 걸쳐 호수 둘레길, 포토존, 전망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이 밝힌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구간은 데크와 야자매트길로 조성된다.

양 의원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과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만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원미희 의원(비례)은 "2022년 강원도청과 시군의 자금관리 이자 수익률이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인 0.5%대에 불과해 기금운용 이자 수입은 184억~588억원의 손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54억~24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정 이자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고 선정 시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최저이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같은 당 심오섭 의원(강릉2)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를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기홍 의원(원주3)과 박대현 의원(화천)은 각각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운영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2024 03 06 ()

19

江原日報

강원특별자치도의 동해 연안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원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강원 동해 연안 약 30만 m², 즉 축구장 40개 규모의 면적이 흔적도 없이

침식돼 사라졌다. 침식의 원인에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방파제 축조 등 인공적인 요인도 큰 지분을 차지한다.

강원 동해 연안이 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관광자원의 손실을 넘어 도민들 삶의 터전과 직결돼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환경 재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해안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조사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연안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연안 침식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 연안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010년부터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 강원 동해 연안의 침식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모니터링의 효과는 어땠을까? 연안 침식은 그 정도에 따라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 총 4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때 C등급과 D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침식 우심률'이라 하며 이것이 높을수록 침식에 더 노출된 지역이다. 2022년 기준

강원포럼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침식 우심률은 52%인데, 전국 평균인 44.7%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필자는 이에 의구심을 가지고, 연안 침식 모니터링 결과가 담긴 최종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보고서 결론 부분이 '복사 붙여넣기' 수준임을 발견했다. 상시 파랑 관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과 양변사의 과학적 근거

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결론의 소재목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가 거의 똑같이 반복됐다. 물론 매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이라는 특성상 그 결론이 비슷하게 도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4년 내내 문장의 토씨 하나까지 똑같은 결론이 반복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담당하는 대학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용역비로는 누적액 115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월등히 높은 침식 우심률, 연구보고서 결론의 반복이 막대한 혈세 투입의 결과라기엔 너무나도 실망스럽

다. 설령 실제로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결과를 실제 연안 정비 절차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무엇을 위한 연구 용역이며, 누구를 위한 예산 투입인

가? 14년 동안 동일한 곳에 115억원이라는 거액을 안겨주어 연구기관을 인일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 것이 문제인지, 수년간 반복되는 모니터링 결과에도 무대책·무방비 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필자가 감히 직언하건대, '연안 침식 실태조사사업'은 여태까지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에 도청 및 관련 기관에 세

가지들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연구 용역 업체 선정 시 충분한 역량과 경쟁력

을 갖추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발굴해낼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 업체를 선정할 것. 둘째, 연구 용역의 결과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 셋째, 연구 용역 결과가 실제 행정에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연안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 도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동해안 연안 침식과 사라진 혈세

2024 03 05 ()

KBS 춘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불투명



[앵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10년이 다 되도록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터미널 건물 소유권마저 민간업체로 넘어갔는데, 정상화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2000년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항로를 운항했지만 운영사 경영난 등으로 2014년 6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 결국,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했지만, 제때 응찰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한 민간업체에 낙찰됐습니다.

[강정호/강원도의원 : "소유권을 강원도가 취득하게끔 도의회에서 예산까지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개인업체에게 민간업체에게 낙찰이 됐거든요. 민간업체와 협의해서 하루 속히..."]

민간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터미널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선사 유치 등 이렇다 할 사업 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항만부지가 활용되지 않으면서, 강원도는 해당 업체 측에 항만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업체 측과 협상을 통해 터미널 매입을 추진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태/강원도 해운팀장 :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그 국제여객터미널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속초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업체 측이 강원도에 협상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순조로운 협상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터미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조연주 yeonjoo@kbs.co.kr

江原日報

2024 03 06 ()

21

◇박기영강원특별자치도의
회 안전건설위원
장(춘천)은 6일
오후 3시 봄내체
육관에서 열리는
2024 강원건설



건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2024 03 06 ()

江原日報

13

10년 방치 속초항 여객터미널 道 매입 촉구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태 지사와 면담 현안 논의
접경지역 포함·우수시장박람회 보조금 등 건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5일 도청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만나 속초 현안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갖추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누락된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돼 정당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 10월 속초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비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다.

이병선 시장은 “앞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100년의 글로벌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속초】속초시가 10년째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항만관리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속히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5일 도청을 찾아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11월 속초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운항이 재개됐지만 항로 운영의 핵심인 프라인 여객터미널이 확보되지 않아 운항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0년부터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으나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다 지난해 법원경매를 통해 민간업체에 낙찰됐다. 그럼에도 업체는 정상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접경지역 포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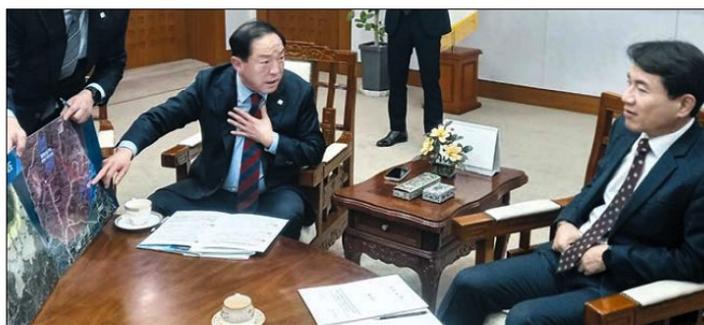
강원도민일보

2024 03 06 ()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가 매입을”

16

이병선 시장, 김 지사와 면담
우수시장박람회 도비 보조 등
지역현안 행·재정 지원 건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10년째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항만관리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속히 터미널을 매입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항로 운영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속초북

방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으나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고 2014년부터 운영을 멈춘 상태다. 특히 국내 유일의 ‘민간 소유 터미널’로 민간기업의 재정 상

태에 따라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항로 운항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시장은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누락된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돼 정당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2024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비 보조금을 건의하는 등 모두 5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 발전 원동력이 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속초시도 특별자치시대에 발맞춰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강원 4개 의대, 정원 200명 증원 신청

작년 조사보다 20% 이상 증가
통과 시 내년 467명으로 늘어
“교육여건 미비...무리한 추진”
강원대 교수들 삭발투쟁 반발

정부가 지난 4일 자정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의과대학이 200명의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각 대학이 밝힌 증원 규모 164명(본보 2023년 10월30일자 4면 보도)보다 36명 많은 규모다. 그러나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실제 교육 여건과 교수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을 신청했다며 항의하는 등 내부 반발까지 터져 나와 후폭풍도 우려된다. ▶관련기사 5면

■ 도내 의대 정원 200명 늘어나
나-강원특별자치도 내 의과대학이 모두 희망 증원 인원만큼 배정받는다면 도내 의과대학 정원은 2023학년도 기준 267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467명까지 늘어난다.

가장 많은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강원대다. 당초 정원 49명에서 100명까지 51명의 증원을 희망했던 강원대는 정원을 91명 늘어난 140명으로 신청했다.

한림대는 2023년 기준 정원 76명에서 30~40명 선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세대원주의대도

2023학년도 기준 정원 93명에서 30% 늘어난 120여명 안팎으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톨릭관동대도 현재 정원 49명에서 100명까지 51명의 인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 의대 교수 “무리한 증원” 반발=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

은 5일 의과대학 앞에서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교육 여건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 신청이라며 반발했다.

박서화·최영재·김인규기자

2면에 계속

정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609명 도입

군-NH농협 군지부-4개 지역농협 공동 협력
군 “농촌 인력난 해소 최선” 농가 지원 팔 걸어

【정선】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이 지역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활용한 ‘인력난 완전 해소’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에서 최승준 군수를 비롯한 박종범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전영득 정선농협 조합장, 김창선 예미농협 조합장, 주재경 여량농협 조합장, 손재우 임계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인력증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지역농협들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군은 올 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올해 609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 609명 중 농가형 계절근로자 320명을 72개 농가에 배치하고,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등 4개 지역 농협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13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인력증개센터 사업에 임계농협과 예미농협이 선정돼 2억9,2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6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와 4개 지역농협이 전국 최초로 군 단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 최대 8개월간 인력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범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은 “정선군 농촌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농협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촌인력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25@kwnews.co.kr



9364억 원을 들여 춘천시 광관리 일원 368만㎡ 부지를 개발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기업혁신파크 부지 전경. 김정호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 '성큼' ... 정부평가 우위 선점

경북 포항·전남 순천과 3파전
춘천 입지·앵커기업 건설 유리

속보=춘천시 광관리 일원 368만㎡ 부지를 개발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본지 3월 5일자 1면)의 정부평가에서 경쟁 우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모 사업에 뛰어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춘천시가 입지 요건과 투자 규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공모에서 최종 후보군에 오른 지자체는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경북 포항, 충남 당진, 경남 거제 등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거제와 당진을 기업혁신파크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포항시, 순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추가 선정을 두고 3파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 공모 진행 상황은 비공개"라면서도 "기업혁신파크 선정 절차는 3월 마무리된다"고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기업의 입주 공간과 주택, 교육·의료 시설, 각종 생활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앵커기업 참여 여부가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총사업비는 936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춘천시는 향토기업인 더존비즈온과 손잡았다. IT 분야 중견기업인 더존비

즈온의 시가 총액은 올해 1월 기준 1조 3323억원, 연매출은 25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더존비즈온의 투자 요인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앵커기업이 건설하고, 확보 가능한 부지도 넓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덕형 ▶ 관련기사 2면

江原日報

12

수출입 불균형 옥계항 기반시설 시급

컨테이너 3,343개 수입할 때 수출1개뿐 물류사 경영난 선적 위한 이동식 하버크레인 요구에 도 안전 이유 불허

【강릉】속보=지난해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본보 2023년 8월 21일자 12면 등 보도) 이후 국제 무역항으로 변모 중인 강릉 옥계항의 수출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강릉시 및 국제물류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옥계항을 통한 수입량은 총 3,343TEU에 달한다. 반면 같은 시기 옥계항을 통한 수출량은 1TEU에 불과했다.

옥계항에 들어온 국제무역선이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에는 사실상 빈 컨테이너만 싣고 가고 있는 셈으로, 이는 국제 물류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무역업계는 이동식 하버크레인 등 기반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옥계항의 하버크레인은 고정식으로 한 척당 최대 180TEU만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이 설치될 경우 한 척당 300~400TEU를 실을 수 있어 무역량 증대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농·수산물이 많은 항구 특성상 냉동·냉장 컨테이너 설비가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옥계항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 중인 지방관리 무역항인 만큼 적극적인 도 정책이 없다면 시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동식 하버크레인은 도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옥계항의 국가무역항 승격 등 미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

강원도민일보

02

① 9364억원 대규모 투자 ② 균형발전론 ③ 수도권 인접성

기업혁신파크 춘천시 경쟁우위 분석



기업혁신파크 마지막 '켓'을 두고 춘천시와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936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과 수도권 인접성 등을 내세우며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공모 평가 기준에서 △투자·사업수요(20점) △지역 균형 발전(10점) △기업의 사업추진 역량(2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20점)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정했다. 각 평가 항목을 고려하면 춘

350여곳 기업 사업 참여 의향

제2경춘국도·GTX 연장 호재

강원형 첨단산업 역량 이점도

춘천시가 포항시와 순천시보다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춘천시는 350여 곳의 기업으로부터 기업혁신파크 사업 참여 의향을 받았다. 투자 예정액에서도 앞선다. 춘천시는 9364억원을, 포항시와 순천시는 각각 2000여 억원·200억~300억원을 기업혁신파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규모 복합 개발을 진행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투자 예정액 규모만 보더라도 춘천시에 긍정적인

'기업도시 시즌2'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현황

강원도 춘천시

- ▶ 바이오·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업도시 조성 (부지 368만㎡·투자액 9364억원)
- ▶ 경상북도 포함시
- ▶ 바이오·수소·이차전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부지 50만㎡ 이상·투자액 2000여 억원)
- ▶ 전라남도 순천시
- ▶ 바이오 관련 미래산업 육성 (부지 99만㎡·투자액 200억~300억원)
- ▶ 충남 당진·경남 거제 >>> 2월 선정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 역시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다. 강원도는 제주(2006년)와 세종(2012년)에 이어 전국 세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춘천시는 도청이 소

재한 강원도 행정 수도로서 명성을 이어왔지만, 최근 인구 증가 정세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론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 GTX-B 춘천 연장 확정 등도 호재다. 제2경춘국도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29년 개통시 수도권과 강원도를 25분으로 연결한다. 기존 국도 46호선을 이용하면 50분이 소요된다. 2030년 완공되는 GTX-B 노선은 춘천역과 서울역, 인천역을 각각 55분·90분대로 주파한다. 춘천시가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기업의 기업 혁신파크 이전 여부에 상당한 요인 요

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춘천시와 포항시, 순천시는 이번 공모에서 첨단산업을 전면으로 내걸었다. 포항시는 바이오와 수소, 이차전지 분야를, 순천시는 바이오 관련 미래산업에 초점을 뒀다. 춘천시는 ICT·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관련 첨단산업을 연계·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146개 바이오·ICT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춘천·원주) 중심지에도 연결된다. 여기에 춘천시는 흥천군과 함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에도 나서서 등 강원형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02

ITX 마음 손실비용 감소...강원도 분담액 2억8500만원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태백·영동선 ITX마음 열차와 관련, 강원도의 손실비용 분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태백·영동선 ITX마음 열차에 승차한 인원은 11만 5742명으로 집계됐다.

또 철도 노선거리 대비 승차객의 탑승거리를 계산한 승차율은 64.9%다.

도는 승차율이 당초 예상했던 50%보다 상향함에 따라 도의 손실비용 분담액은 5억원에서 2억8500만원으로 43%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경기지역 중앙선 정차역 축소로 장거리 이용 고객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장거리 이용 고객의 증가는 결국 승차율 확대에 이어져 손실비용 분담액은 줄어 들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출산부터 돌봄까지’ 양양육아지원센터 개원

미취학 영유아 지정까지 보육 군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계획

【양양】양양에 출산부터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개원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개원한 국공립 양양 하나어린이집과 현남 하나어린이집은 2020년 7월 하나금융그룹의 민간협력 공모에 선정돼 양양군-하나금융공익재단-한솔어린이보육재단 간 협약을 맺으며 추진됐다.

양양 하나어린이집은 16개

반에 170명이, 현남 하나어린이집은 5개 반에 17명이 모집됐으며, 각각 41명, 8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한다.

이들 어린이집에서는 미취학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시간은 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해 오전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로, 추후 부모들과 협의해 조정할 계획이다.

양양 하나어린이집은 사업비 111억2,300만원을 들여 양양읍 서문1길 32 일원에 건립됐다.

지역 어린이집 4개소가 통합됐고, 원활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사실, 휴게실, 보육실, 보

건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현남 하나어린이집은 사업비 21억8,900만원을 들여 현남면 해송천로 5 일원에 건립됐다.

양양군은 올 5월 중 문을 여는 공공산후조리원·작은도서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철저히 준비해 출산 후 산후조리부터 육아와 방과 후 돌봄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최초 지자체 주도 ‘화천형 온종일 돌봄’ 시작 아이들 웃음꽃

군커뮤니티센터 운영 첫날 북적 초등생 외국인 담임 배정 등 만족 중·고교생도 스터디 카페 ‘열광’

화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자체 주도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천 커뮤니티센터에는 운영 첫날인 지난 4일 돌봄학생들과 학습실을 이용하는 중·고교생들이 잇따라 방문하며 시끌벅적 활기를 띠었다.

이날 돌봄 대상인 초등 저학년들의 학교 수업이 끝나자 돌봄교실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안심셔틀이나 학교 버스, 학부모 차량을 타고 커뮤니티센터에 속속 도착했다.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지난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안의호

다. 이날부터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는 학생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학년 학생 가운데 선발된 80명. 학생들은 입학식을 갖고 각각 배정된

반에 입실해 내국인·외국인 담임과 첫 만남을 가진 뒤 영어 이름 만들기를 비롯해 같은 반 친구들과 얼굴을 익히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배정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동안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대형 실내놀이터에는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해 신나는 놀이를 즐겼으며

센터 4층에 마련된 스터디 카페에는 학교 수업을 마친 지역중·고교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공부에 열중했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한 한 중학생은 “새로 조성한 건물이라 시설이 깨끗하고 조용해 공부에 집중하기가 좋았다”며 “지역에 이처럼 좋은 시설이 생겨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학부모들도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최신 시설, 외국인 담임 배치 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입학식에 참석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어린이들이 마음에 고향 화천을 항상 간직하고, 세계 무대에서 각자 품은 뜻을 펼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수 할아버지가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강원도민일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평창가스폭발 보상 기약 없는 기다림

이재민 두달째 임시거처 생활 ‘중대시민재해’ 적용여부 쟁점 해당 사업장 바닥 면적 관련

속보=새해 첫날 평창의 한 마을을 불바다로 만든 LPG 충전소 폭발사고(본지 2월 20일자 6면 등)가 발생한지 두달여 지난 가운데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머무르며 기약없는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한 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 4가구 13명은 현재 평창청소수련원에서 머물며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여관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머물 곳을 옮긴 이재민들은 “당장 머무는데 불편한 것은 없지만 빨리 마무리돼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이다. 이재민 김모씨는 “아무래도 집이 최고지만 지금 100% 만족은 하지 못해도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상황”이라며 “겨울이니까 불에 탄 집이 더 망가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를 접한 이후작은 소리에 도 잠잠 놀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태였지만 평창군에서 치료 등 신경을 많이 써줘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도 전했다. 그는 “아직 보상 협의가 이뤄져 출가분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일도 해야하는데 해결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모든 이재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A(36)씨가 지난달 사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가스충전소의 면적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업장 면적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대시민재해 해당 조건의 경우 피해 정도와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사고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정도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등으로, 또 주유소·가스충전소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면 바닥 면적 2000㎡ 이상이어야 한다. 본지 확인 결과, 주유소용지 등 등록 부지 면적은 2783㎡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날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이라 면적의 경우 확인 이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06 ()

/ 19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에 사활을

-5조원 생산, 4만명 고용... 신성장동력 기대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춘천 유치 공모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의 미래를 좌우할 혁신파크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입니다. 춘천시가 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랫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에서 소외됐던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위상을 경제도시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총사업비 93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해 기업 입주 공간과 주택, 교육·의료 시설, 각종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고,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5배 완화됩니다. 입주 기업은 법인세와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지정 시,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계획에 이미 기업 350여 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는 2033년에 생산 유발 효과는 5조원, 고용 유발 효과는 4만명

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과 손잡고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에 뛰어 들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9364억 원을 투입,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부지 368만㎡를 데이터 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IT와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를 결합한 지식 첨단 산업 시설을 짓고 인근에 연구 시설과 상업 업무 시설, 주거 시설, 교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파크는 강원도 첨단 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습니다.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도시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와 담양군 등이 우선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국면과 맞물려 최종 선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 유치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기업 활동 여건을 만들고 정부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응원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도정치권도 팔을 걷고 유치전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는 도민들의 인식을 바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06 ()

/ 19

정부 의대 증원 정밀한 정책 내놔야

-국립대 교육강화책 병행하고, 수도권 증원은 취지 맞지않아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2471명을 증원을 요청했고 서울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5개 대학에서 565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수요조사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이 붕괴돼가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로 정상화하고, 수도권으로의 원정진료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수도권 의대의 정원 증원은 추진돼선 안 됩니다.

강원도내에서는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에서 기존 49명에서 9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는 시도마다 의대 정원에 심한 차이를 보여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를 보유한 강원대를 포함한 국립대에서는 대학병원 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공공의료 안정화 취지에 맞춰 대개 2~3배 정도 증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배정에 따른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의대 교수측에서는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이 갖춰져있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학장을 비

롯해 어제(3월 5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단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련의와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악화된 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별 증원 배정 압박으로 의대 교수 등 구성원 반발이 가세돼 더 복잡해지는 중입니다. 단순히 2027년까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는 발표로는 미흡합니다. 특히 미니 의대를 보유한 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취약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교육여건 강화 실행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만큼 거점 국립대학교의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이 병행돼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식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립대는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해소가 어렵고 총선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 투입 계획이 명확하게 병행돼야 합니다. 서울의 우수한 대형병원과 같이 강원대병원 등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책 역시 정밀하게 제시돼야 정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3 06 ()

/ 19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선정 모든 행정력 동원

춘천시가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공모에 돌입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다방면의 행보가 요구된다. 기필코 이뤄 낸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빠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지사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에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시즌2 버전으로 2005년 기업도시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다”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시 남산면 광관리 일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철저한 공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춘천시가 그동안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위해 역동적으로 뛰었고 김

지사가 직접 밝힌 만큼 춘천이 반드시 기업혁신파크로 지정돼야 한다. 기업혁신파크 공모에는 포항, 아산, 순천시와 담양군이 뛰어 들었다. 이들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여러 난관을 헤치고 고비를 넘어야 하며 경쟁 자치단체들의 도전을 뿌리쳐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동력을 갖추는 지혜 또한 발휘돼야 마땅하다.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간 힘겨투기’로 변질돼선 안 된다. 과거 일부 국책사업 선정 때처럼 정권 실세나 유력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면 극심한 후유증이 오게 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그럼에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간 국책사업 유치

전에 끊임없이 나섰던 것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춘천은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기업혁신파크 지정 요건상 부지가 최소 50만㎡는 돼야 한다. 춘천은 남산면 광관리 일대에 최소 지정요건의 7배가 넘는 360만㎡ 부지를 확보했고, 남춘천C와 3분 거리,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탁월하다. 춘천시는 이를 잘 부각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도시를 이끌고 나갈 확실한 선도 기업으로 더존이 존재

하며 여러 기업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글로벌대학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 춘천시가 기업혁

남산면 광관리 일대 9,364억원 투입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도시 시즌2’로 불러

지역경제 희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신파크로 최종 선정되면 도와 춘천시, 더존비즈온 등은 남산면 광관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시티, 개방형 산학협력도시를 조성하며 이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 즉,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서 자족성을 갖춘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게 된다.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선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역 발전의 정체로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며 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가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다.

江原日報

2024 03 06 ()

/ 19

강원 경제 적신호, 지역경기 진작 대책 시급하다

강원 경제가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창업기업 수가 전년 대비 2,700곳 넘게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창업기업 동향'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내 창업기업 수는 3만5,854개로 2022년보다 2,760개(-7.1%) 적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창업기업 수가 전년 대비 6.0%(7만8,862개)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더 크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4년 1월 강원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도내 소비 흐름을 보여 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4로 전년 동월 대비 15.3% 급감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투자 지표인 건설수주마저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경기 불확실성도 커졌다. 올 1월 건설수주액은 1,28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8억원(-53.2%) 줄었다. 지난해 9월(-73.5%)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강원 수출액도 11개월 만에 2억 달러를 밑돌았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올 1월 도내 수출액이 1억9,758만 달러(환율 1,333.7원 기준 2,635억여원)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이어 온 2억 달러 이상 수출 기록이 11개월 만에 깨졌다. 이에 무역수

지 또한 2개월 연속 3억 달러 적자를 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들쭉이고 있다. 물류비와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질 것인 만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물가 통계의 비교 대상인 2023년 상반기에는 3~5%대의 고물가가 유지됐다. 2%대 물가의 조속하고 확실한 안착에 느슨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내수 부진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2월 강원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사업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5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 장기 평균(59) 수준을 크게 하회해 2개월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지만 정보기술(IT) 수출의 기여 부분을 제외하면 내수 기준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